

# 갈등의 역사에서 화합의 역사로\*

— 프랑스·독일 역사교과서 합의와 제1차 세계대전의 문제—

## 이 용 재

- I. 머리말
- II. 전간기의 역사교과서와 제1차 세계 대전
- III. 프랑스·독일 역사교과서 협의
- IV. 60년대의 역사교과서와 제1차 세계 대전
- V. 맺음말

### I. 머리말

19세기말-20세기초 프랑스인과 독일인 사이의 배타적 민족의식에 바탕을 둔 자민족 중심의 역사교육은 오늘날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역사전쟁’을 방불케 하기에 충분했다. 흔히 ‘마리안느(Marianne)’와 ‘게르마니아(Germania)’로 표상되는 이 두 이웃은 지난 수 세기 동안 국운을 건 전면전을 여러 차례 치렀을 뿐만 아니라 늘 상대방에 견주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역동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다. 바로 이 같은 대립 과정에서 과거에 대한 국민의 기억이 정치화하고, 이 정치화된 기억이 자국 중심적인 역사학 및 역사 교육과 맞물려서 물질적인 준비 못지않게 국민의 정신적 무장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것이다. 프랑스 지식인들은 독일 역사교육에 담긴 국수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 세계관을 비난하면서 시민적 자유와 보편 문화의 창달에 주력하는 프랑스의 역사교육의 우월성을 내세웠다. 반면에 독일 역사가들은 프랑스의 역사교육이 독일의 역사와 문화를 군국주의와 팽창주의의 상징인 양 왜곡하고 있으며 이는 곧 독일에 대한 적개심과 보복의지의 표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4-072-AS3013).

현이라는 주장을 펴곤 했다.

경쟁과 우월감을 부추기는 이러한 자민족중심 사관과 역사교육이 마침내 20세기에 들어 유럽인들이 두 차례의 엄청난 전쟁을 통해 치러야 했던 자기 파멸의 비극적 체험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전화의 한복판에 있었던 두 당사자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지난 갈등의 역사를 반성하고 화합을 약속하는 새로운 역사교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싹튼 것은 바로 이러한 상호 대립과 반목을 조장할 수 있는 자민족 중심의 배타적인 역사교육에 대한 뼈저린 반성에서였다.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가와 일선 교육자들은 지난 전쟁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화합의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양국간의 엇갈린 역사 해석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싹튼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가라앉고 상호공존의 분위기를 찾던 1930년대부터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1935년 합의안」과 「1951년 합의안」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킨 문제는 물론 여전히 기억이 생생한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해석과 평가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문제는 전쟁 책임과 배상금 문제를 놓고 다투는 양국 정치권의 현안이자 이와 맞물린 역사 교육의 관건이기도 했다. 그것은 또한 두 차례에 걸친 합의안 도출에 따라 일정한 합의점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두 나라가 공동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전히 “가장 열띤 논쟁점 중 하나”<sup>1)</sup>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세기에 양차 세계대전의 전화를 겪으면서 진행된 독일-프랑스의 역사교육 협의활동의 성과와 그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역사 교육에 수렴되는 과정을 살펴보려는 것이다.<sup>2)</sup>

1) H. Müller, “Allemagne, la mémoire disputée de la Grande Guerre”, *L’Histoire*, No. 303(novembre 2005), p. 28.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편찬한 역사교과서 첫 권은 1945년 이후의 시기를 다룬 것으로 2006년 가을 신학기에 두 나라에서 동시에 출판되었다. 프랑스 교사 5명과 독일 교사 5명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P. Geisse & G. Le Quintrec(dir.), *Histoire/Geschichte, manuel d’Histoire franco-allemand*(Nathan/Klette, 2006). 19세기 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까지를 다룬 둘째 권은 2008년 상반기에 출판될 예정이다.

2) 독일-프랑스의 역사교육 합의와 교과서 내용을 다룬 국내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승렬, 「수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협의」, 『역사와

## II. 전간기의 역사교과서와 제1차 세계대전

### 1. 전쟁 직후

라인 강을 사이에 둔 두 이웃이 화해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은 특히 1870년 보불전쟁부터였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민족 통일의 숙원을 달성한 독일은 유럽의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프랑스를 국제적으로 고립화시키는 정책을 썼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알사스-로렌 땅마저 독일에게 할양하는 패전의 굴욕 속에서 언젠가 ‘복수(Revanche)’하겠다는 호전적인 민족주의가 불타올랐다. 보불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반세기는 양국에서 민족사의 신화가 만발한 시기이자 적대적 타자관에 입각한 배타적인 국민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였다. 민족사의 유구한 전통을 확립하는 작업은 오랜 세월 동안 맞서 왔던 “민족의 숙적(ennemi national)”<sup>3)</sup>이라는 실제적이거나 또는 가상적인 실체를 전제로 했다. 독일인들이 라인 강 저편의 ‘철천지원수(Erbfeind)’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는 만큼, 프랑스인들은 ‘독일놈(boche)’에게 증오의 눈길을 던졌다.

국가 권력의 정치 전략과 일반 대중의 정서가 서로 뒤엉키면서 빚어낸 이러한 자민족 중심의 세계관은 당시의 역사 교육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양국의 역사교과서는 약속이나 한 듯 한편으로 자민족의 우월성을 고양하고 민족 영웅의 계보를 만들어냈으며, 다른 한편으로 두 나라 사이에 펼쳐진 전쟁과 갈등의 역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승리의 환호와 패배의 상처를 부각시켰다.<sup>4)</sup> 1870년 전쟁의 ‘승리’가 독일에게 자국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증명하는 사례였다면, 그 ‘패배’는 프랑스에게 자라는 세대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게 해주는 쓰라린 교훈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두 나라에서 출판된 초등생용 역사교과서에는 전쟁의 승패를 통해 ‘자국’의

경계』, 제49호(2003년 12월); 박지현, 민족 교육에서 유럽통합 교육으로?, 프랑스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제13집(2005년 8월).

3) M. Jeismann, *La Patrie de l'ennemi, la notion d'ennemi national et la représentation de la nation en Allemagne et en France de 1792 à 1918*(CNRS Editions, 1997), p. 207.

4) S. Krapoth, *France-Allemagne, du duel au duo, de Napoléon à nos jours* (Privat, 2005), pp. 19-20.

긍지를 높이고 ‘적국’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모든 국민이 손에 무기를 들고, 자신의 영예와 평화를 해치는 공격을 격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독일 전역에 프랑스의 경솔한 도발에 대한 분노가 끓어 넘쳤다.…… 모든 사회계급이 민족의 영예를 구하기 위해 기꺼운 희생정신으로 뭉쳤다.<sup>5)</sup>

1870년에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다. 독일 병사는 우리보다 훨씬 많았다. 그들은 우리보다 전쟁에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더 훌륭한 대포를 갖고 있었다. 우리 병사들은 놀라울 정도로 용감했지만 패했다.…… 프랑스는 이 불행한 전쟁 후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전쟁에 아주 잘 준비되어 있다.<sup>6)</sup>

이웃을 ‘적’으로 상정한 배타적인 민족 감정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가져왔으며 끔찍한 살육 전쟁을 치르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1919년 6월, 승전국들은 난항을 거듭한 끝에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다. 패전국 독일은 알사스-로렌을 프랑스에 반환하고 해외 식민지들을 포기해야 했으며, 군비 축소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30년에 걸쳐 1,320억 금화 마르크라는 엄청난 배상금을 연합국 측에 지불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베르사유 조약 제231조는 전쟁의 책임이 전적으로 독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독일은 즉각적으로 베르사유 조약의 ‘명령(diktat)’에 반발하고 나섰으며 국내에서 배상금과 전쟁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패전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는 여론이 들끓었다. 독일 정부가 연합국 측에게도 전쟁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요량으로 방대한 분량의 외교문서 편찬에 착수하자, 이에 자극받은 프랑스 정부는 독일의 침략 의도를 규명하기 위해 자국의 외교문서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sup>7)</sup>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의 ‘기원(origines)’ 또는 ‘원인(causes)’ 문제는 전쟁 책임과

5) F. Neubauer, *Lehrbuch der Geschichte für höhere Lehranstalten*, Teil V, *Vom westfälischen Frieden bis auf unsere Zeit*(Halle, 1910), p. 163. (S. Krapoth, *France-Allemagne*, p. 18에서 재인용)

6) E. Lavis, *Histoire de France, cours élémentaire*(Armand Colin, 1913), pp. 175-176.

7) *Die Grosse Politik der Europäischen Kabinette 1871-1914: Sammlung der Diplomatischen Akten des Auswärtigen Amtes*, 40 bd., 1923-1926; *Documents diplomatiques français relatifs aux origines de la guerre de 1914*(Imprimerie nationale, 1929-1959), vol. 41.

배상금 지불을 둘러싼 정치 현안과 맞물리면서 종전 직후부터 양국의 현대사 연구자들이 총동원된 초미의 학문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양국의 역사교과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심지어 멸시의 감정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초에 선보인 양국 교과서에서 가장 극명하게 내용이 엇갈린 부분은 물론 제1차 세계대전 자체에 대한 서술이었다. 종전 직후 1919년 1월에 성립한 신생 바이마르(Weimar) 공화국은 패권주의적 군사 문화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공민의식을 함양하는 일환으로 역사 교육의 쇄신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국가주의 교육의 틀을 고수하려는 보수적 교육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후의 경제적 곤궁과 물자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교과서 개발 사업은 줄곧 공수포로 그치곤 했다. 이러한 전후 상황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초기의 교과서들이 패전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제2제국의 유산과 자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sup>8)</sup>

패전국 독일의 역사교육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관해서 주로 전쟁 책임을 연합국 측에 돌림으로써 자국민의 도덕적 책임을 완회시키는 데 주목적을 두었다. 역사교과서들은 1914년 8월에서 대전의 발발에 이르는 긴장 국면마다 프랑스와 러시아가 취한 강경조치들을 나열해놓고, 이를 통해 독일이 보여준 대응의 정당성과 러시아와 프랑스 측의 도발 의도를 강조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곤 했다. 나아가 역사교과서들은 전쟁 책임뿐만 아니라 패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서술 양식을 보여준다. 역사교과서에서 전쟁에 대한 기술은 흔히 1917년 말 러시아와의 강화조약 체결에 따른 독일의 승리로 끝나거나 아니면 1918년 봄 독일군의 성공적인 총공세로 끝을 맺곤 하며 그해 8월 연합군의 대규모 반격 이후 수세에 몰린 독일군이 국내에서 혁명이 발생하고 빌헬름 2세가 퇴위하자 결국 휴전(1918년 11월 11일)을 제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아주 짤막한 언급이 뒤따를 뿐이다.<sup>9)</sup> 1923년에 출판된, 국제연맹 산하 국

8) J. Bauvois, "Images comparée de la Grande Guerre dans les manuels d'histoire allemands et français de la première moitié du XX<sup>e</sup> siècle",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vol. 21(1999), p. 366.

9) P. Jardin, "La <Légende du coup de poignard> dans les manuels scolaires allemands des années 1920", in J.-J. Becker et al., *Guerre et Cultures*

제평화 교육개발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종전 후 1920년대 초에 새로 출판된 독일 역사교과서들 중 일부는 자국의 패배를 굳이 인정하지 않을 요량으로 출판 년도를 1917년이나 1918년으로 허위 기록함으로써 종전 상황에 대한 언급을 교묘하게 피해가곤 했다.<sup>10)</sup> 이 보고서는 심지어 1921년에 출판된 한 지리교과서는 알사스-로렌의 지형을 독일 영토 안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sup>11)</sup>

마찬가지로 승전국 프랑스의 역사교과서는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 어조를 누그러트리지 않고 있었으며, 독일의 전쟁책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대전 직후에 초등학교 상급반용 역사교과서로 널리 읽힌 것은 '라비스(le Lavissee)'와 '고티에-데샹(le Gauthier-Deschamps)'이었다. 라비스가 "1871년 1월 18일은 독일의 무력과 오만함이 승리한 날이었다면, 1919년 6월 28일은 독일을 응징하는 날이었다"<sup>12)</sup>라고 적었다면, 고티에-데샹은 "전쟁의 주요 원인은 세계 지배를 위해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독일의 야욕에 있었다"라거나 "이 20세기의 야만족들이 마치 5세기의 훈족처럼 평화로운 프랑스 북부 마을로 쳐들어왔다"<sup>13)</sup>라고 적었다. 한편 중등교육 분야에서 역사교과서의 대명사로 군림한 것은 아셰트(Hachette) 출판사가 내놓은 유명한 '말레-이삭(le Malet-Isaac)'<sup>14)</sup> 시리즈였다. '말레-이삭'의 경우에도, 독일의 전

1914-1918(Armand Coilm, 1994), pp. 273-274.

10) *Enquête sur les livres scolaires d'après-guerre*, Vol. I(France, Belgique, Allemagne, Autriche, Grande-Bretagne, Italie, Bulgarie), (Centre Européen de la Dotation Carnegie, 1923), p. 231.

11) *Ibid.*, pp. 187-188. Dröber-Weyrauther, *Ertkund für höhere Lehranstalten*, Nuremberg(Carl Koch, 1921).

12) E. Lavissee, *Histoire de France, cours moyen*(Armand Coilm, 1920), p. 214.

13) Gauthier-Deschamps(Mlle Miallier Souvigny), *Cours d'histoire de France, cours moyen*(Hachette, 1923), pp. 134, 142.

14) 'Malet-Isaac'은 당시 Albert Malet(1864-1915)와 Jules Isaac(1877-1963)이 함께 저술한 중등과정 역사교과서 시리즈를 말한다. Louis le Grand 중등학교의 역사교사였던 Malet는 Hachette 출판사의 요청으로 1905년부터 모두 7 권(3,000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역사교재를 내놓아 큰 인기를 끌었다. 전쟁 중에 Malet가 전사하자 Hachette 출판사는 새 교과과정에 편입된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집필을 당시 Saint-Louis 중등학교의 역사교사이던 Isaac에게 맡겼다. 1923년에 교과과정이 다시 개편되자 Isaac은 Malet의 책을 완전히 개정해서 *Cours d'histoire Malet-Isaac à l'usage de l'enseignement secondaire*(vol. 7. 1923-1933)을 내놓았다. 새 교과서에 Malet의 이름을 병기한 것은 시리즈의 유명세를 이어가려는 출판사의 판매 전략 때문이었다. 따

쟁 도발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다른 누구보다 제국주의적인 독일의 지도층은 전쟁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었다. 이러한 독일의 심성 역시 유럽 전쟁의 깊은 원인들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독일의 경계는 너무 좁으므로 인구가 적은 반면 식민지를 많이 보유한 프랑스를 헤치고 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여론이 독일인들 사이에 자리잡았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전쟁 도발이라는 생각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프리드리히 2세와 비스마르크 시절에 교육받은 거의 모든 독일 엘리트들은 오직 무력만이 정의를 창조하며[원저자 강조] 따라서 정치에서 전쟁에 호소한다는 것은 필요하고도 정당한 조치였다. 이러한 교리는 독일 국민 모두가 공유한 확신, 즉 세계의 어떤 군대도 독일 군에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 의존하고 있었다.<sup>15)</sup>

요컨대 192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라인 강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두 나라의 역사교과서에는 자라는 세대에게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전쟁을 막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팽배한 적대의식 속에서였다.

## 2.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제1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유럽의 몰락’이라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가장 참혹한 전쟁을 치른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각국의 정치권은 평화공존의 길을 모색했다. 물론 패전국으로서 일방적인 전쟁책임과 엄청난 배상금을 떠안은 독일에서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터져 나오고, 독일의 재기를 우려한 프랑스가 1923년에 루르 지방을 점령함으로써 양국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또 한 차례의 전쟁은 공멸을 불러온다는 우려 속에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교전당사국들은 1925년에 로카르노(Locarno) 협정을

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Malet-Isaac’은 사실상 Isaac의 작품이다. 1960년대까지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지존’으로 군림한 ‘Malet-Isaac’은 실로 프랑스 역사교육학의 기념비이자 국민정체성을 함양하는 ‘기억의 장소’였다. Isaac의 교육활동과 평화운동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A. Kaspi, *Jules Isaac*(Plon, 2002)을 참조하라.

15) A. Malet & J. Isaac, *Histoire de France et notions d'histoire générale de 1852 à 1920*(Hachette, 1922), pp. 236-237.

맺고 모든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한 1926년, 독일 외상 스트레제만(G. Stresemann)과 프랑스 외상 브리앙(A. Briand)이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자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유럽의 역사교과서 개선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20년대 말-30년대 초의 평화공존의 분위기에서였다.

정치적 긴장과 군사적 대립을 해소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거론된 것은 사실 유럽 각국이 협상국(Entente)과 동맹국(Alliance)의 두 축으로 나뉘어 군비경쟁을 벌이던 19세기말부터였다. 1889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Congress)에 이어서 이듬해 스위스 베른에서 각국의 의회간 상임연합(Permanent Interparliamentary Union)이 창설되었을 때 이미 이 협의회에서 역사교과서의 개선 또는 수정 문제가 제기되었다.<sup>16)</sup> 그러나 군비확장과 패권 장악을 노리는 민족주의적 대결의 시대에 유럽 각국이 마지못해 참여한 국제 협력기구들이 다가올 전쟁을 막는 데 무기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기구도 활동 계획도 갖지 못한 당시의 교과서 개선활동은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지 못한 채 선언적 성격에 머물렀을 뿐이다. 갈수록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교과서 개선 문제는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으며 역사 교육의 문제에 각국 정부들이 관심을 표명하려면 적어도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기다려야 했다.

1920년대의 역사교과서 개선 논의는 국제기구의 주도에 의해서 각국 정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거나 또는 당사국 역사교육 단체들 사이의 자발적인 만남을 통해 진행되었다. 논의의 주축은 1925년에 국제연맹 산하기구로 제네바에 설립된 지적 협력 국제위원회였다. 지적 협력 국제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연맹 회원국들의 교과서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1926년에 에스파냐 대표 카사레스(Casares)의 발의로 소위 ‘카사레스 결의안’을 통과시켰다.<sup>17)</sup>

16) O.-E. Schüddekopf, *History Teaching and History Textbook Revision*,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1967), p. 13. 유럽평의회는 역사교육 개선위원회에서 펴낸 이 책은 영·독·불어로 동시에 출판되었다. 필자가 참조한 것은 영어판이다. 이 책은 『미래를 건설하는 역사교육』(김승렬 역, 역사비평사, 2003)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번역되어 있다.

17) J.-L. Claparède, *L'enseignement de l'histoire et l'esprit international*(Les

역사교과서에서 명백하게 부적당한 표현이나 명백하게 불명확한 관계를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정중하게 [국제위원회]의 당사국 지부협의회에 통보한다.

카사레스 결의안은 상호 공존을 다짐하는 ‘제네바 정신(esprit de Genève)’에 입각해서 각국 교과서에서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결정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잘못된 내용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발의된 거의 모든 조치나 결정사항들과 마찬가지로 카사레스 결의안 역시 회원국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라기보다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의 성격이 강했다. 자민족 중심의 역사교육 관행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제연맹의 교과서 지침은 특히 독일 역사가와 교원들에게 교육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교과서 개선을 위한 국제 협의가 당장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라인강을 마주 한 두 이웃 사이에는 비록 일시적이거나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역사학과 역사교육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변화의 움직임은 특히 프랑스에서 더 뚜렷하게 감지되었으며, 역사 교육계의 모색은 역사학 연구의 새로운 경향에 의해서 더욱 뒷받침되었다. 1929년에 마르크 블로흐(M. Bloch)와 루시앵 페브르(L. Febvre)의 주도로 닷을 올린 『아날Annales』은 사건 중심의 정치사에서 탈피하여 비교 연구로 나아가고자 했으며, 19세기 실증주의 사학을 계승한 세노보(Ch. Seignobos) 역시 국가 중심의 정치체도사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농업, 산업, 통상, 인구 등 지금까지 어둠에 묻혀 있던 일상적 삶의 관점에서” ‘프랑스 민족’을 논하고자 했다.<sup>18)</sup> 양국간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1930년대 초반부터 독일인과 독일 역사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담으려 힘쓰는 역사책들이 등장했다. 역사가 가스통 켈레(G. Zeller)는 『천년 동안의 프랑스와 독일』(1932)에서 지난 년 동안 두 나라 사이에 전쟁과 침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해와 공영의 시대도 있었으며 두 나라는 원래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sup>19)</sup>

역사 연구의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역사 교육에서 19세기류의 ‘민족 신화’를 완전히 털어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타민족의 역사를 폄하하는 국수주의적 역사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선 교육자들의 노력에 큰

Presses universitaires, 1931), p. 33.

18) Ch. Seignobos, *Histoire sincère de la nation française*(P.U.F., 1933), p. 7.

19) G. Zeller, *La France et L'Allemagne depuis dix siècles*(Armand Colin, 1932).

힘을 실어주었다.<sup>20)</sup> 프랑스 전국교원노조 서기장 조르주 라피에르(G. Lapiere)는 1926년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연례 총회에서 “① 우리는 어린 학생들을 전쟁공포 박물관에 집어넣는 역사책들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② 우리는 불신, 경멸, 증오, 전쟁의 씨앗을 담고 있는 왜곡된 역사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③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증오의 감정에 복종하는 교과서의 저자들을 추방한다”라는 보고서를 채택했다.<sup>21)</sup> 라피에르의 과감한 도전에 응한 8만여 교사들의 서명이 전국에서 줄을 잇자 출판사들은 문제되는 초등학생용 교재 28종(역사교과서 7종)을 자진 수거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22)</sup> 이와 같이 1920년대에 교육 현장에서 평화주의 교육을 실천하는 데에는 좌파 교원노조에 속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큰 몫을 했다.<sup>23)</sup>

양국의 해빙무드 속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기원과 전쟁책임 문제도 달리 서술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애국주의적이고 심지어 반독일적인 정서가 여전히 강했으며 교과서의 내용과 편제를 단 기간에 바꾼다는 것도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1914년 전쟁의 직접 간접의 원인들은 한결같이 독일에게 그 책임을 지운다”<sup>24)</sup>라는 표현과 맥을 같이 하는 서술 내용들이 1920년대 후반의 교과

20) J. Bauvois-Cauchepin, *Enseignement de l'histoire et mythologie nationale, Allemagne-France du début du XX<sup>e</sup> siècle aux années 1950*(Peter Lang, 2002), p. 51.

21) “Rapport tendant à la radiation des livres scolaires de tendances bellicistes figurant sur les listes départementales”, O.-E. Schüddekopf, *History Teaching*, pp. 19-20에서 재인용.

22) 문제가 된 역사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Gauthier-Deschamps, *Histoire de France, cours moyen*(Hachette); Gauthier-Deschamps, *Histoire de France, cours supérieur*(Hachette); Cl Augé & M. Petit, *Histoire de France, 1er Livre*(Larousse); Cl Augé & M. Petit, *Histoire de France, 2e Livre*(Larousse); Blanchet & Toutain, *Histoire de France, cours supérieur*(Belin); Ammann & Coutant, *Petite Histoire de la Guerre*(Nathan); *Histoire de la Guerre par un Français*(Hatier). G. Lapiere, “La question des manuels scolaires dans l'enseignement primaire”, *Revue d'Histoire de la Guerre Mondiale*, No. 2(avril 1938), pp. 57-58.

23) J. Girault, “Instituteurs syndiqués et enseignement de l'Histoire”,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hors série 1984, Colloque, *Cent Ans d'enseignement de l'Histoire 1881-1991*, p. 174-175.

24) Ch. Aimond, *Histoire, cours supérieur, 1852 à nos jours*(J. de Gigord, 1928),

서들에서도 여전히 자주 나타난다.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것은 특히 당시 최고 판매부수를 자랑하는 ‘말레-이삭’의 변모이다. 1923년에 도입된 새 교과과정에 맞추어 교과서를 다시 쓰면서 이삭은 독일의 도발 의도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던 지금까지의 서술 형태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독일 측의 주장과 관점을 어느 정도 반영한 새로운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공식적으로 열강들 사이의 관계는 그리 어긋남이 없었다. 하지만 불신이 팽배했다. 각자가 침략 야욕을 상대방에게 돌렸으며 군사적 채비를 서둘렀다. 독일에서 1913년 7월 3일 통과된 군비증강 법은 병력과 군비를 엄청나게 증대시켰다. 프랑스에서 군 복무기간은 3년으로 연장되었다.……

연합국의 합의에 따라 독일 대표단이 베르사유에 불려왔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몇 가지 조항에 대해 중요한 수정을 얻어낼 수 없었다.…… 결렬의 위협에 못 이겨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인들은 이것을 ‘강요된 평화(Friedensdiktat, paix dictée)’라고 불렀다.<sup>25)</sup>

이삭이 선보인 교과서 서술 방식, 즉 ‘두 가지 관점(deux points de vue)’의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다. 그는 사건들을 서술할 때 하단부에 같은 사건에 대해 독일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을 발췌해 실음으로써 “독일 학생들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술회한다.<sup>26)</sup>

1929년 판 ‘말레-이삭’이 보여준 독일 문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법은 집필자 이삭의 학문적인 반성과 평화를 위한 교육 활동의 결실이기도 했다. 이삭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쟁의 기원과 책임 문제를 학문적으로 파고들어 『역사적 토론: 전쟁의 기원 문제』(1933)를 내놓았다. 그는 전쟁 책임 문제에 대한 프랑스 측 권위자로 통하는 피에르 르누뱅(P. Renouvin)과 카미유 블로흐(C. Bloch)<sup>27)</sup>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동맹관계에서 전쟁의 기원을 찾

p. 236.

25) A. Malet & J. Isaac, *Histoire contemporaine depuis le milieu du XIX<sup>e</sup> siècle* (Hachette, 1929), pp. 665, 740.

26) J. Isaac, “Regards sur le passé”,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Professeur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Numéro spécial 173(novembre 1961), p. 155.

27) P. Renouvin, *Les Origines immédiates de la guerre*(Alfred Costes, 1925); C. Bloch, *Les Causes de la Guerre mondiale, Précis historique*(Paul Hartmann,

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만일 중부 제국들[동맹국]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제공했다면, 유럽[협상국]은 적들조차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의도적으로 전쟁을 수용했다”라는 주장으로 맞섰다.<sup>28)</sup> 그에 따르면 “가장 엄정한 역사적 시각으로 볼 때, 책임이라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중부 제국들이든, 프랑스·러시아든, 삼국협상국이든, 어느 한쪽만을 겨냥한 일방적인 전쟁책임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론짓는다.<sup>29)</sup>

반면에 독일 측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 대다수 독일 역사가와 교사들은 ‘제네바 정신’을 승전국이 내세우는 이상론으로 받아들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교과서 서술에서도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물론 1920년대 말에 출판된 몇몇 역사책에서 연합국 측의 전쟁 도발을 규탄하는 어조가 종전 직후의 교과서들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독일의 상대적 ‘결백’을 밝히려는 기본 의도에는 변함이 없지만 적국에게 무조건 책임을 돌리는 정형화된 서술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독일이 오스트리아로 하여금 지나치게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놓아둔 것은 아주 치명적이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가 독일과의 동맹을 믿고 자신의 방침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반면에 프랑스와 러시아는 이러한 실책을 저지르지 않았다. 러시아와 프랑스 측에서는 세르비아 사태를 오스트리아를 굴복시키는 쪽으로 몰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전쟁 쪽으로 몰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서 있었다.…… 러시아의 태도는 명백했으며 프랑스는 자기 동맹국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sup>30)</sup>

하지만 대개의 교과서는 여전히 전쟁 발발의 책임을 프랑스와 러시아 측에 돌리는 일방적인 서술로 가득 차 있다.

적국의 정치인들은 독일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프랑스와 러시아에 먼저 전쟁을 선포하는 실책을 범하도록 교묘한 외교 술책을 구사했다. 이렇게 동맹의

1933).

28) J. Isaac, *Un débat historique, le problème des origines de la guerre*(Rieder Editeurs, 1933), p. 228.

29) *Ibid.*, p. 229.

30) F. Schnabel, *Grundriß der Geschichte für die Oberstufe*, Teil IV(*Geschichte der neuesten Zeit*), Leipzig/Berlin, 1927, pp. 110-112. (S. Krapoth, *France-Allemagne*, p. 26에서 재인용)

의무는 협상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다. 적국의 국민들은 독일이 사실상 공격을 받았는데도 독일이 도발을 했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sup>31)</sup>

전반적으로 볼 때, 적어도 1930년대까지는 역사교과서 개정 작업에서 프랑스가 한 발 앞서가고 독일이 머뭇거리며 그 뒤를 따라가는 형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 III. 프랑스·독일 역사교과서 협의

#### 1. 1935년 합의안

1932년에 역사교육 국제위원회가 헤이그에서 발족했다. 여기서 피에르 르누뱅, 쥘 이삭, 조르주 라피에르 등 프랑스 측 대표자는 파울 헤레(P. Herre), 아르노르트 라이만(A. Reimann) 등 독일 측 대표자와 양국간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독일에서 1933년에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고 국제 관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자 역사교육 국제위원회는 실질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 역사가들이 별도로 모여서 역사교과서 개선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의가 놀랍게도 독일 측 역사가 라이만에게서 나왔다. 사실 독일에서는 1933년에 나치가 정권을 장악한 후, 국가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민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새로 발족한 독일 역사협회는 내무상 로젠베르크의 후원 아래 독일인의 긍지와 우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공식 역사교과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독일로서는 자국 교육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독일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해석을 싣고 있다고 판단된 프랑스의 역사교과서의 편파성을 부각시킬 기회를 잡을 요량으로 라이만의 교섭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었다. 따라서 프랑스 측으로서는 독일의 제안을 반신반의하면서도 기꺼이 환영하였으며, 정부로부터의 어떤 지침이나 훈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에 나섰다.

쟁점 사항들에 대해 상대방의 교과서 내용을 검토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측 대표들이 회동한 것은 1935년 11월이었다. 프랑스 측에서는 보고서 작성

31) H. Marte, *Deutsches Werden*, Teil III-*Neueste Zeit*, (C. C. Buchners Verlag, 1929), p. 209. (S. Krapoth, "Visions comparées des manuels scolaires en France et en Allemagne", *Cahiers d'histoire*, No. 93, 2004, p. 51에서 재인용)

자 5명을 포함해서 7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나 독일 측에서는 약속과 달리 2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sup>32)</sup> 양측 대표단은 미리 작성해온 보고서를 서로 교차검토하면서 일주일 동안 주로 프랑스혁명 이후의 독·불 현대사의 주요 국면들에 대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절대왕정 기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의 치적에 대한 평가, 프랑스혁명의 의의와 독일에 미친 영향, 나폴레옹의 유럽 제패와 이에 맞선 독일의 해방전쟁, 19세기 상반기 독일과 프랑스의 우호관계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의견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1871년 독·불전쟁부터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이르는 시기, 즉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양국 국민들에게 분노와 증오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었다.

가장 견해차가 큰 사안은 물론 여전히 양국간에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제1차 세계대전의 기원 및 전쟁 책임 문제였다. 전쟁의 기원과 책임 문제는 승전국 프랑스든 패전국 독일이든 국민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양보하기 힘든 사안이었으며 두 나라 역사학계의 끝없는 논쟁거리였다. 따라서 의견조율이 힘든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합의조항 하단에 견해차를 밝힌 '유보(réserves)'를 달았다. 총 39개 조항 중 유보가 달린 조항은 나폴레옹 3세와 비스마르크의 대립에 대한 제8조,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갈등을 부른 1911년의 모로코 위기에 대한 제15조,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과 전후 처리에 관련된 7개 조항(제20조, 제26-29조, 제35조, 제37조) 등 모두 9개 조항에 이른다. 이로써 마침내 1935년에 처음으로 「프랑스-독일 역사교과서 합의안」이 탄생했다. 양측 대표는 "모든 교과서 제작자와 저자들에게 전달되고 일선 교육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채택된 결의안(유보조항 포함)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출판하기로"<sup>33)</sup>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독일 측이 출판 연기를 요청하는 진통을 겪은 끝에 프랑스에서 1937년 5월이 되어서야 역사교원협회 기관지인 『역사교원협회보』를 비롯

32) 프랑스 측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P. Renouvin(소르본 대학 교수, 국제관계사 전공), J. Isaac(중등학교 교사, 교육부 장학관, 역사교과서 저자), M. Morizet(역사교원협회 회장), P. Mantoux(학예연구소 교수), G. Pagès(소르본 대학 교수), Weill-Reynal(중등학교 교사), P. Lapierre(중등학교 교사, 전국교원노조 대표). 한편 독일 측 참석자는 Arnold Reimann(역사교원협회 회장, 베를린 역사협회 회장), Paul Herre(라이프치히 대학 교수, 제국기록보관소 원장)이다.

33) "Les manuels scolaires d'histoire en France et en Allemagne",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Professeur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No. 91bis(mai 1937), p. 23.

해서 전국교원노조 기관지 『해방 학교』(10만 부 발행), 『세계대전사 평론』 등에 실렸으며,<sup>34)</sup> 여러 시사 주간지들이 양국 역사가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합의안이 나치의 산하 단체 기관지인 『국가사회주의 교육』의 전국 판이 아니라 그리 주목을 끌지 못하는 베를린 지부 판에 실려 프랑스 측의 실망을 샀다.<sup>35)</sup> 더구나 독일 역사교원협회의 회보인 『과거와 현재』가 합의안 대신에 이에 대한 주저와 비판을 담은 논평을 신자 프랑스 측의 놀라움은 더욱 컸다.<sup>36)</sup> 이듬해 초 『베를린 월보』에 실린 한 이름의 논설은 양국의 합의 노력 자체에 완전한 썩기를 박았다.

합의 형식을 만들어 내려면 초(超)객관성의 지평 위에 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거부한다. 우리 독일인들에게 이것은 우리의 국가사회주의 세계관과 어긋난다. 각 세대는 자신의 민족적 필요에 따라 고유한 역사 개념을 만들어 낸다. 목숨을 건 투쟁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들을 역사 속에서 찾는다는 것은 모든 민족의 자연권이다.<sup>37)</sup>

결국 국가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하려는 독일 정부의 개입과 이에 따른 독일 역사가들의 태도 변화에 의해 「35년 합의안」은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다. 1935년 독일과 프랑스의 첫 교과서 합의는 “프랑스 측의 성급한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면서”<sup>38)</sup> 막을 내렸다.

사실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장악한 후 독일에서의 국제 교과서 협의활동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나치의 집권기에도 독일 역사가 및 교사들이 프랑스 또는 폴란드의 역사가 및 교사들과 역사교과서 개선을 위해 자못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기는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나치 정권의 정

34)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Professeur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No. 91bis (mai 1937); *L'école émancipateice*(1er juin 1937); *Revue d'Histoire de la Guerre mondiale*(mai 1937).

35) *National Sozialistische Erziehung, Gau Berlin*(18 märz 1937).

36) W. Ziegler, “Die Entgiftung der deutschen und französicchen Lehrbücher”, *Vergangenheit und Gegenwart*, No. 9(septembre 1937).

37) “Zür deutsch-französischen Verständigung über Lehrbücher”, *Berliner Monatshefte* (Februar 1938), (J. Isaac, “Une tentative d'accord franco-allemand au sujet des manuels d'histoire”, *Revue d'histoire de la Guerre mondiale*(avril 1938), p. 128에서 재인용.)

38) J. Isaac, “Une tentative d'accord franco-allemand au sujet des manuels d'histoire”, *Revue d'histoire de la Guerre mondiale*(avril 1938), p. 130.

치적 책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 책략의 효력이 떨어질 때에는 가차 없이 교섭을 중단했던 것이다. 더구나 나치의 침략으로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유럽에서의 모든 교과서 협의활동이 중단되었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뿐만 아니라 유럽의 교전 당사국들 사이에서 역사 교과서 개선활동이 일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또 한 차례의 전쟁을 겪어야만 했다.

## 2. 1951년 합의안

1945년 종전 직후, 패전국 독일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내용에 대한 국제적 협의활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었다. 독일에서의 교육은 1945년 8월 포츠담 협정의 원칙에 따라 ‘점령지 재교육’의 연합국 점령정책 아래 재정비되었다. 점령군 당국은 나치즘과 군국주의적 특성을 담고 있는 모든 교과서와 교육교재를 금지시키는 강한 교육 통제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민주주의 원리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교육제도를 독일에 이식하기 위해 서독 역사가들과 인접국 역사가들 사이의 교류와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종전 후 국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나 유럽평의회 등 국제기구들 역시 교과서 개선 사업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제연합의 교육문화기구로 1945년 발족한 유네스코는 처음부터 교과서 개선활동을 국제적 문화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는 중요 징검다리 삼았다. 유네스코는 1947년부터 교과서 개선을 주제로 한 일련의 대규모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관계 단체들을 후원했다. 1946년 파리 총회에서는 교과서와 교재 개선을 위해 각국 유네스코 위원회나 관련단체들과 협력하여 여러 차례 유럽 각국 교과서들을 서로 비교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유네스코는 1949년에 『교과서와 교재 개선 지침서』를 출판하고 다자간 또는 양자간 교과서 협의에 참고가 될 이른바 ‘협정 모델(Model Accord)’을 제시하기도 했다.

범세계적 규모로 활동을 펼친 유네스코와는 별도로, 전후 유럽의 평화와 공영을 위해 조직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an) 역시 역사교육 개선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했다. 유럽평의회 산하의 문화협력위원회는 1954년 체결된 유럽문화협정 사업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의 역사교과서를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는 국제회의를 여러 차례 주도했다. 이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활동과 정부의 재정 지원은 물론 1950년대에 유럽 역사교육 개선 활

등이 거둔 괄목할만한 성과의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교과서 개선활동이 당사국들 사이에서 일정한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국제기구나 정부의 후원과는 별도로 관련 역사단체들과 교육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처음으로 맺어진 1935년 합의안,은 물론 실패로 끝났으나, 그것은 당시 개선 작업을 지켜보았던 한 프랑스 역사가의 회고처럼, “교훈과 희망을 담고 있는”<sup>39)</sup>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다. 그것은 역사 문제에 대한 합의는 현재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교훈이었으며, 히틀러의 통치가 끝나고 새로운 평화 모색기가 왔으며 따라서 상황이 무르익었다는 점에서 희망이었다. 1950년대의 역사교과서 개선 활동은 미·소 강대국의 경쟁에 따른 냉전시대의 개막과 유럽 통합운동의 출범이라는 달라진 국제 정세의 덕을 보았다. 유럽의 단합과 공영을 위해서는 우선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1948년부터 프랑스 점령당국의 교육국과 프랑스 외무부의 문화관계국은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 역사가들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했다. 프랑스 측에서는 프랑스 역사지리교사 협회가, 독일 측에서는 브라운슈바이크 대학 교수 게오르크 에케르트(G. Eckert)가 운영하는 국제 교과서연구센터가 민간 차원에서의 회합과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교과서 문제를 논의할 전문가 위원회가 설립되어 두 나라 역사가 및 교사들의 첫 회합(제1회 회의)이 1950년 8월 독일의 프리부르크에서 열렸다. 풍부한 교육 경험을 가진 프랑스 역사 교육자 10명, 독일 역사 교육자 23명이 모인 프리부르크 회합에서는 교과서 개선을 위한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양국 교육제도와 학교 수업 운영 실태 및 교과서 편제에 대한 비교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1951년은 프랑스 측의 발의로 독일을 포함해 유럽 6개국이 참여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출범함으로써 통합 유럽을 향한 긴 여정의 첫발을 내디딘 해이다. 이러한 화해의 분위기에 발맞추어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가들은 1951년 5월에 파리에서 양자간 회합을 열고 1935년 권고안의 전반 20개 항목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였으며, 이어서 10월에 마인츠 회합에서는 나머지 19개 항목을

39) J. M. D’Hoop, “Les aspects des relations intellectuelles franco-allemandes contemporaines: la coopération dans la recherche et l’enseignement de l’histoire”, *Historiens et Géographes*, No. 280(octobre 1980), p. 109.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로써 마침내 40개 조항으로 된 51년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곧 독일과 프랑스에서 일선 교육자들이 널리 참조할 수 있는 회보지에 게재되었다.<sup>40)</sup>

「1951년 합의안」은 1935년에 다룬 주제들을 항목별로 재검토한 것이나 합의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를 반영해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1920)의 의의(제38조)와 히틀러 제3제국(1933-1939)의 등장(제40조)까지를 다루고 있다. 양국의 역사교과서 편제와 교육과정으로 볼 때 중등학교 현대사 교육은 1939년까지만 다룬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논의는 먼 훗날로 미루어졌다.<sup>41)</sup> 1951년 합의안,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은 1935년 합의안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미해결로 남겨놓은 유보 사항들을 모두 삭제하면서 합의의 폭을 더욱 확대했다는 점이다.

1950년대는 프랑스-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이 역사교육 개선 작업에서 상당한 결실은 얻은 시기로, 당시 교과서 개선 국제 활동에 적극 참여했던 독일 역사가 슈데코프(O.-E. Schüddekopf)의 표현처럼 실로 “교과서 개선 작업의 영웅적 단계”<sup>42)</sup>라고 할 만하다. 슈데코프의 조사에 따르면, 1945년에서 1965년까지 20년 동안 역사교과서 개선을 위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국제 회합이 모두 146회 개최되었다. 특히 유럽 교육당국이나 역사가들의 주목을 끈 것은 물론 한때 영원한 적성국이자 오늘날 통합 유럽을 향한 두 견인차 구실을 하는 프랑스와 독일 쌍방간의 합의 활동이었다. 1951년 합의안,으로 고무된 독일과 프랑스의 교과서 개선 활동은 유럽통합 운동과 해빙무드를 타고 1960년대 말까지 계속 이어졌다. 1954년 10월에 체결된 프랑스·서독 문화협정,은 양국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역사교과서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새삼 강조했다.

40)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Professeur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No. 130bis (mars 1952);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1952); *International Jahrbuch für Geschichtsunterricht*(1953). 한편 「1951년 합의안 은 O.-E. Schüddekopf, *History Teaching*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41)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그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는 1987년 합의안 이 만들어졌다.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병기된 합의안은 두 나라에서 동시에 출판되었다. *La France et l’Allemagne, Espace et Histoire contemporaine / Deutschland und Frankreich, Raum und Zeitgeschichte*(Paris/Braunschweig, 1988).

42) O.-E. Schüddekopf, *History Teaching*, p. 26.

제13조: 협정 당사국은 모든 수단을 다해 그리고 자국 법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상대방과 관련된 문제들을 가능한 한 가장 객관적으로 제시하도록 노력하며, 양국 국민의 우호를 해칠 수 있는 어떤 감정적 성격의 서술도 교과서에서, 특히 역사교과서에서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협정 당사국은 이러한 취지를 향한 모든 노력을 지원한다.<sup>43)</sup>

이러한 독·불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두 나라 역사가들의 교과서 개선 논의는 1950년 8월 프리부르크 회동 이후 1967년 쾨니히스빈터(Koenigswinter) 회동까지 모두 13차례나 이어졌다. 회합 때마다 정해진 해당 주제에 대해 상대방 교과서를 분석한 보고서를 토대로 교차토론이 진행되었으며, 1951년 합의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시기인 중세 시대까지 논의가 연장되었다. 예컨대 독일 역사가들은 4-5세기 경의 ‘민족 대이동(Völkerwanderungen)’을 프랑스 교과서들이 ‘야만족의 침입(invasions barbares)’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야만족’이라는 다소 경멸적인 표현은 당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게르만족’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sup>44)</sup> 한편 프랑스 역사가들은 독일 교과서들에서 프랑스의 종교 개혁을 주로 루터교의 역할로 한정하고 칼뱅교를 소홀히 다루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sup>45)</sup> 논의가 진행될수록 서로의 견해차이가 좁혀졌으며 거시적인 전망에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 서술 모델이 제시되었다.

### 3.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합의’

「35년 합의안」과 「51년 합의안」 사이의 달라진 내용을 잘 보여주는 한 예로 특히 가장 민감한 현안이었던 전쟁의 발발과 책임 문제와 관련된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자.

① 전쟁의 원인: 35년 합의안에서는 전쟁 발발의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

43) O.-E. Schüddekopf, *History Teaching*, p. 38에서 재인용.

44) “La Septième rencontre franco-allemande des professeurs d’histoire”,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Professeur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No. 150(mars 1957), pp. 412-417.

45) “La Huitième rencontre franco-allemande des professeurs d’histoire”,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Professeur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No. 155(avril 1958), pp. 437-442.

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양측 참가자들은 전쟁을 벌이려는 어떤 계획된 의도를 어느 한쪽 편에게만 지을 수 없으며 양 측 모두에 주전파들이 있었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프랑스 대표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 채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시간을 미룰수록 승리가능성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주전파들이 프랑스보다 독일에서 더 강했다는 유보를 달았다. 반면에 독일 대표는 프랑스의 푸앙카레(Poincaré)와 러시아의 이스볼스키(Isvolsky)의 정책이 유럽을 전쟁으로 몰고 가는 위기를 초래했다고 반박했다. 1913년 겨울부터 러시아가 유럽 전쟁을 유발할 위험을 무릅쓰고 근동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했다는 것이다. (35년 합의안, 제20조)

이에 대해 51년 합의안,은 양측의 견해를 조율한 합의점을 찾았다. 독일과 프랑스 국민 대다수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으나, 독일, 특히 군 진영은 프랑스보다 기꺼이 전쟁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는 독일 사회에서 군부가 차지하는 지위와 관련이 있으며 더욱이 지리적으로 유럽 중심에 위치한 관계로 항상 적성국들에게 포위되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독일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 대표는 푸앙카레가 전쟁을 유발하는 정책을 썼다는 종래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대신 불-러 협조가 독일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는 데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51년 합의안」, 제19조)

② 벨기에 중립 문제: 35년 합의안에서는 독일군에 의한 벨기에의 국경 침입 문제에 대해 참여한 논점이 오갔다. 벨기에의 중립성 여부는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책임과도 관련된 중요 사안이었던 만큼 양측 대표들은 긴 유보 조항을 첨가했다. 독일이 벨기에의 영토를 침범한 것은 벨기에의 중립성에 대한 국제 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영국이 전쟁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 당시 연합국 측의 일반적인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독일 대표는 벨기에가 1913년 이후 영국과 새로운 군사 협정을 체결했을 때 이미 벨기에 스스로 중립성 의무를 저버렸으며 독일의 벨기에 침공은 당시 연합국이 그리스의 중립성을 침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 상황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군사 작전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프랑스 대표는 영국과 벨기에 사이의 군사 협정은 벨기에의 중립성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벨기에 침범이 어쩔 수 없는 ‘군사적 긴급 사태’였다는 주장은 독일의 국제 협약 위반에 대한 ‘해명’이지 ‘정당화’ 논리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는 연합국이 그리스의 일부를 점령한 것이나 프랑스가 벨기에에 진주한 것은 독일이 벨기에 영토를 침범한 것과 어떤 유사상도 없다는 단서를 달았

다. (35년 합의안, 제29조)

벨기에의 중립성 침해 여부가 35년 합의안에서는 격론의 대상이었던 반면, 「51년 합의안」은 아주 짙막하고 명쾌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양측 대표는 제1차 모로코 위기 때 영국과 벨기에 사이에 군사 회담이 오고간 것은 사실이지만 대전 직전에 벨기에가 엄격한 중립의 의무를 준수했다는 사실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는 벨기에의 중립성을 침범한 독일의 책임을 독일 측이 뒤늦게나마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51년 합의안」 제25조)

③ 베르사유 조약: 베르사유 조약에 명기된 독일의 전쟁 책임과 배상금 지불 문제는 대전 직후부터 양국간에 첨예한 정치 현안이자 학계의 논쟁 사안이었던 만큼 1935년 합의에서도 양측 대표 사이에 견해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베르사유 조약에 관한 한 35년 합의안」은 합의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유보와 반대 의견의 개진에 가까웠다. 「35년 합의안」에서 독일 대표는 베르사유 조약이 책정한 엄청난 액수는 독일인에게 배상금이라기보다는 공물(tribut)로 받아들여졌으며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알사스-로렌을 비롯해서 유럽과 식민지의 영토를 앗아간 것은 정의를 거스르는 승전국 측의 무력 행위라고 해석했다. 더욱이 전쟁책임에 대한 조항은 독일에 대한 도덕적 규탄마저 담고 있다는 것이 독일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대표는 배상금 명목으로 독일이 지불한 액수는 프랑스가 실제로 입은 물질적 피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영토 병합과 루르 탄전의 점령은 배상금 지불 이행을 위한 일종의 담보였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리고 전쟁 책임 조항을 도덕적 규탄으로 해석하는 독일의 관점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유보 의견을 덧붙였다. (「35년 합의안」 제35조-제37조)

반면에 51년 합의안」은 베르사유 조약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후의 해결책에 수반되는 수많은 어려움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전제하면서, 양측 대표가 동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고자 했다. 51년 합의안」은 우선 베르사유 조약 231조가 독일의 법적 책임을 물을 뿐 도덕적 규탄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일방적인 범죄 자백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했다. 합의안은 또한 독일의 배상금 지불 불이행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지불된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에 따르는 기술적인 어려움에서 나온 것이고 프랑스가 받은 액수는 전쟁으로 입은 피해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프랑스가 루르 지방을 점령한 것은 독일에게 지불 이행을 강요하기 위한 담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독

일의 민족 감정을 자극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51년 합의안, 제29조-제35조)

그리고 51년 합의안」의 제27조는 전쟁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들에 대해 양측이 이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의 합의 내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 제27조 〉

1914년에 독일 정책은 유럽 전쟁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독일 정책은 무엇보다도 오스트리아-헝가리와 맺은 의무 사항에 달려 있었다.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오스트리아-헝가리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베를린 정부는 비엔나 정부에게 백지수표에 가까운 보장을 주었다. 베를린 정부는 세르비아와의 충돌을 1908년-1909년 때와 마찬가지로 국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좌우되었다. 하지만 베를린 정부는 필요할 경우 유럽 전쟁을 감수할 채비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베를린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오스트리아의 정책에 대한 중재 행동을 취하는 것을 게을리 했다. 베트만-홀베크가 이러한 방향으로 조취를 취한 것은 단지 7월 28일부터였다. 반면에, 유럽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한 몰트케는 7월 30일에 독일 총사령관으로서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의 총동원령을 앞당겨야만 하는 목적으로 엄격한 군사적인 이유들을 고집했다.

7월 30일에 발효된 러시아의 총동원령은 필연적으로 독일 정부가 총동원을 결정하게 만들었다. 7월 31일부터 독일의 태도는 다른 열강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고려보다 군사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되었다. 독일 정부의 결정은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프랑스가 결코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며 두 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프랑스군을 신속하게 포위하고 섬멸하기 위해 벨기에를 침공해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단호한 확신에서 나왔다.

이러한 군사적 고려는 도처에서 군사동원령을 유발하고, 독일의 경우 최후통첩과 전쟁선포를 앞당기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대전의 발발로 치닫는 각 단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으며 긴장이 증폭되는 국면마다 정치적 의도보다 군사적 이유가 강조된다. 이러한 절제된 서술 방식은 지난 한 세대 동안 양측의 외교 문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은 학문적 성과를 반영한 것인 동시에 쟁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가능한 만큼의 합의를 도출해내고자 한 양측 대표의 노력이 맺은 결실로 보인다. 양측 대표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전쟁 책임을 떠안기려 하기에 앞서 전쟁에 가담하게 된 상대방의 입장과 의도를 공정하게 평가하려 노력했다. '누구에게

전쟁 책임이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왜 모두가 전쟁에 말려들게 되었는가'라는 문제로 논의의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 「51년 합의안」이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서 가지는 의의가 바로 이것이다.

#### IV. 60년대의 역사교과서와 제1차 세계대전

「51년 합의안」에서 이미 다루어진 문제들에 대해서도 역사 연구의 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1961년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성격을 규명한 문제를 두고 양국 역사학자와 교사들 사이에 교차발표가 이루어졌다.<sup>46)</sup> 특히 1965년 8월에 프랑스 디종(Dijon)에서 열린 제12차 회합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점검하는 대규모 학술대회였다.<sup>47)</sup> 프랑스 측의 피에르 르누앵과 자크 드로(J. Droz) 그리고 독일 측의 볼프강 뎀젠(W. Mommsen)과 프리츠 피셔(F. Fischer) 등 학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역사가들이 발표를 맡은 것은 전쟁의 발발과 책임에 대한 그 동안의 굵직한 학문적 성과를 일선 교육현장으로 연결시키려는 양국 교육계의 기획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1961년에 『세계패권의 추구 *Griff nach der Weltmacht*』를 발표하여 독일의 전쟁책임을 주장하면서 소위 '피셔 논쟁'을 불러일으켜 독일인 자의식의 뇌관을 건드린 당사자가 독일 측 발표자로 연단에 올랐다는 사실은 나치의 몰락 이후 독일 역사학의 고뇌에 찬 자기반성과 모색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출판된 독일의 역사교과서는 한편으로 양국 사이의 교과서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한편으로 자국사를 보는 새로운 인식틀을 제시하는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여, 자민족의 우월성을 일방적으로 변호하는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주장을 널리 수용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다.<sup>48)</sup> 특히 현대사의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책임

46) "La France et la République de Weimar 1919-1931",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Professeur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Numéro spécial 173(novembre 1961), pp. 153-198.

47) "L'Allemagne et la France et leur but de guerre(1914-1918)",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Professeur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No. 198(mai 1966), pp. 781-837.

48) H. Tison, "La mémoire de la guerre 14-18 dans les manuels scolaires français d'histoire 1920-1990", in J.-J. Becker et al., *Guerre et Cultures 1914-1918* (Armand Colin, 1994), p. 302.

문제에 대한 서술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1960년대의 대표적인 독일 역사교과서를 살펴보자.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은 러시아와의 충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프랑스 정치가 러시아와의 동맹 의무에 묶여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 정치는 오스트리아와의 동맹 의무로 묶여 있었다. 프랑스는 자신의 응답에 대해 조금도 의혹을 남기지 않았으며, 세르비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산트페테르부르크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충돌은 유럽 동맹 구도의 연쇄작용(Verstrickung)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sup>49)</sup>

독일 측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프랑스와 러시아에 책임을 미루려는 강박관념에서 저만치 벗어나서 충돌을 가져온 국제 관계의 복잡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정 국가에 도발 책임을 지우기에 앞서 동맹 체제로 맺어진 국제관계의 구도 자체를 문제로 삼는다. 전쟁 발발은 동맹체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귀결이며 따라서 어느 한 편에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교과서도 독일에 대해 더 관대해진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평가를 보자.

사건들의 급속한 전개 앞에서 당대인들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논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연쇄(enchaînement)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에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천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전쟁이 끝났을 때, 그들에게 전쟁은 어처구니없는 어리석은 일로 보였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그 호전적인 허장성세로 인해 상당한 [전쟁]책임을 지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참모부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승리를 갈구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전쟁 반대를 외치던 사회주의자 장 조레스가 광신적인 왕당파에게 암살당한 일이나 발칸 반도에서 세르비아와 러시아가 해방 전쟁을 부르짖는 호전적인 선동을 늘어놓은 일 따위로 미루어 볼 때, 패전국 측에게만 무조건 전쟁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없을 듯하다.

전쟁 책임자로 간주됨으로써 독일은 전쟁으로 말미암은 손실을 보상해야 했다. [베르사유] 조약의 기본 조항들이 이리했기 때문에 독일 여론은 거침없이 이를 부당한 "명령(diktat)"이라고 불렀다. 전쟁에서 진 것은 단지 정치가와 외교

49) H. Herzfeld, *Kletta Geschichtliches Unterrichtswerk*, Ausgabe A Band IV: *Weltstaatsystem und Massendemokratie*(Stuttgart, Ernest Klett, 1965), p. 31. (S. Krapoth, "Visions comparées des manuels scolaires", p. 57에서 재인용)

관들의 배신 때문이라는, 당시 독일 참모부가 용의주도하게 퍼트린 생각에 고무되어 독일 국민은 이러한 상황을 참으려 하지 않았다.<sup>50)</sup>

이러한 서술은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 국민에게 얼마나 부당하게 느껴졌는가를 강조한 것으로 종전 직후 독일 국민들 사이에 움튼 불만이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1960년대 양국의 교과서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관해 원인 규명에서 전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기왕의 모든 논쟁점들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 냈다고까지는 말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입장을 참작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수용하려는 서술 내용을 교과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요컨대 지난 20여 년 동안 끈질기게 진행된 양국 역사가들의 교과서 개정 노력은 교과서들에서 상호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거하고 비교적 공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상당한 결실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역사교과서 개선 작업은 국제기구의 활동이나 정부 간 교섭보다는 양측 역사가와 교사들의 양자간 합의에 의해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1930년대에 국제연맹 산하 지적 협력 국제위원회의 활동이나 1940년대 유네스코 산하 문화교류부의 활동이 유럽 각국 사이에 다자간 또는 양자간 교과서 개선 작업을 후원하고 그 큰 틀을 마련해준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협약 체결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는 관련 당사국 역사교원 단체들을 주축으로 역사가와 교사들 사이에 여러 차례 걸친 오랜 논의의 결실이었던 것이다.

지난 반세기에 걸친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교과서 협의 활동에 줄곧 관철된 기본 원칙은 바로 ‘자발성(concours volontaire)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sup>51)</sup> 1935년 협의안이 실패로 끝난 것은 나치의 국가사회주의 교육이 강화되던 1930년대 후반에 독일 측 대표단들이 당국의 공식 위임을 받고 협의에

50) J. Sentou & Ch. O. Carbonell, *Le Monde contemporaine, cours d'histoire*, Classe de Terminale(Delgrave, 1962), pp.11, 26.

51) J.-Cl. Allan “Manuels d'histoire et réconciliation franco-allemande”, in Cl. Carpentier(dir.), *Identité nationale et enseignement de l'histoire*(Harmattan, 1999), p.21.

임한만큼 독일 정부의 정책 변화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부의 훈령으로부터 자유로웠던 1950년대 이후의 협의는 순조로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935년과 1951년에 통과된 ‘합의안’은 양국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교과서 필자와 일선 교사들에게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는 ‘권고안(recommandations)’에 지나지 않았다. 중앙집중화된 교육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는 프랑스에서든 교육 행정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각 주(Land)에 일임되어 있는 독일에서든 교과서의 서술과 채택은 전적으로 해당 저자에게 일임되며, 교과서의 선택은 해당 교사에게 일임된다. 따라서 양국 교원단체 대표들의 협의안이 교과서 개편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는 사실 한 마디로 쉽사리 파악하기 힘들다. 문제는 평화주의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육 당국과 교원들의 의지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 1960년대 프랑스 교과서들은 전반적으로 51년 합의안」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 이는 유럽통합 시대와 더불어 양국 사이에 ‘갈등의 역사’를 넘어 ‘화합의 역사’로 나아가고자 하는 교육계의 희망을 담은 표현이기도 하다. 승전국 프랑스의 경우 ‘화합의 역사’를 위한 노력은 이미 1920년대 말부터 나타났으며 여기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29년판 ‘말레-이삭’이었다. 교과서에 담긴 독일과 독일인의 이미지는 1920년대 말 이후부터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두 차례의 합의안 작성에 밑거름이 된 동시에 또 합의안에 의해 자극받으면서 마침내 1960년대의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적어도 제1차 세계대전의 해석과 평가에 관한 한, 프랑스의 60년대 교과서는 20년대 교과서의 연속판 또는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1960년대에 들어 교과서 협의안이 새로운 교과서 서술 지침으로서의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듯하다. 1935년 교과서 협의에서 독일 대표는 공동 초안에 대해 낱낱이 유보를 달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프랑스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 했다. 그러나 1951년 협의에서는 프랑스가 마련한 초안을 가능한 한 전폭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전범국 독일에서는 연합국에 의해 나치 시대의 역사교육과 교재가 모두 추방되었으며 전후의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교과서들이 집필되어야 했다. 나치 시대에 대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패권주의 역사에 대한 독일 역사학계의 뼈저린 자기반성은 협의안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는 새 교과서들을 내놓는 밑거름이 된 것이

다. 이것은 곧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평가에서도 프랑스 측의 주장에 한 걸음 다가섰음을 의미한다.<sup>52)</sup>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를 다짐하는 새 장을 연 ‘엘리제 조약’ 40주년을 맞이한 2003년 6월, 양국 정부는 젊은 세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독·불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공동 역사교과서의 탄생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낸 양국 교과서 개선 활동의 결실인 동시에 교과서 합의의 틀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만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를 다룬 첫 권은 이미 2006년 9월 신학기에 선을 보였다. 공동 역사교과서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라인 강을 사이에 둔 양측 역사가와 교사들이 둘째 권의 출판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대학교 사학과)

**주제어**: 제1차 세계대전(First World War), 역사교과서(History Textbooks), 교과서 개정(Revision of Textbooks), 프랑스·독일 합의안(French-German Accord), 쥘 이삭(Jules Isaac)

52) 1960년대 이후 독일에서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F. Rousseau, “Ecrire et enseigner la Grande Guerre, toute la Grande Guerre”,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Vol. 21(1999). R. Bendick & R. Riemenschnieder,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dans l’enseignement de l’histoire en Allemagne”, *Historiens et Géographes*, No. 369(février 2000).

## 〈부 록〉

### 제1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 조약에 관련된 「프랑스-독일 합의안(1951년)」의 주요 조항들

- [제18조] 문서들은 1914년에 벌어진 유럽 전쟁의 미리 계획된 의도를 어떤 정부나 어떤 국민에게 지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으며 지도층 사이에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누구나 도발 의사를 상대방에게 돌렸다. 누구나 전쟁 위험을 받아들였으며 동맹 체제와 군비 증강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했다.
- [제19조] ① 독일 참모부 중 일부는 독일의 승리 가능성이 그 이후보다는 1914년에 더 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독일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고려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② 독일과 프랑스의 국민 대다수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 특히 군 진영은 프랑스보다 가까이 중국적으로 전쟁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러한 성향은 독일 사회에서 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관련이 있다. 더구나 독일은 지리적으로 유럽 중심부에 위치했던 까닭에 가능한 적성국들 사이의 동맹에 의해 특히 위협받는다고 항상 느끼고 있었다. ③ 푸양카레가 전쟁을 유인하는 정책을 썼다는 오랜 견해는 이제 독일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동맹 체제가 유럽에서 이러한 상황을 조성했기 때문에 불-러 협조는 독일 측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 [제25조] 제1차 모로코 위기 때에 영국과 벨기에 참모부 사이에 군 관련 회담이 오고가긴 했지만, 전쟁 직전 몇 해 동안 벨기에가 엄격한 중립 정책을 취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 [제26조] ① 1914년에 프랑스의 정책은 독일에 대해 복수전을 치르겠다는 의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독일의 위력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균형추로 여겨진 러시아와의 동맹을 유지하려는 염려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푸양카레 대통령이 7월 23일 산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정부는 동맹 조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언질을 주도록 이끌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러한 선언은 만일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사이의 충돌에 독일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프랑스는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했다. ② 프랑스 정부는 오스트리아에 맞선 러시아의 부분적인 군사동원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7월 30일에 독일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러시아에게 권고했다. 프랑스 대사가 이러한 정부의 훈령을 완벽하게 실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제27조] 1914년에 독일 정책은 유럽 전쟁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독일 정책은 무엇보다도 오스트리아-헝가리와 맺은 의무 사항에 달려 있었다.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오스트리아-헝가리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베를린 정부는 비엔나 정부에게 백지수표에 가까운 보장을 주었다. 베를린 정부는 세르비아와의 충돌을 1908년-1909년 때와 마찬가지로 국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좌우되었다. 하지만 베를린 정부는 필요할 경우 유럽 전쟁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베를린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오스트리아의 정책에 대한 중재 행동을 취하는 것을 게을리 했다. 베르만-홀베크가 이러한 방향으로 조취를 취한 것은 단지 7월 28일부터였다. 반면에, 유럽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한 몰트케는 7월 30일에 독일 총사령관으로서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의 총동원령을 앞당겨야만 하는 목적으로 엄격한 군사적인 이유들을 고집했다. 7월 30일에 발효된 러시아의 총동원령은 필연적으로 독일 정부가 총동원을 결정하게 만들었다. 7월 31일부터 독일의 태도는 다른 열강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고려보다 군사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되었다. 독일 정부의 결정은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프랑스가 결코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며 두 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프랑스 군을 신속하게 포위하고 섬멸하기 위해 벨기에를 침공해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단호한 확신에서 나왔다. 이러한 군사적 고려는 도처에서 군사동원령을 유발하고, 독일의 경우 최후 통첩과 전쟁선포를 앞당기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제28조]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은 일반적으로 '전쟁의 잔학성'에 대한 선전을 부추기는 모든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 독일의 경우, 벨기에와 프랑스에서의 '의용군 전쟁'에 대해 여전히 남아 있는 오류는 비정규적으로 동원된 의용군을 벨기에의 '민병대'와 혼동하는 데서 생긴 것이다. 프랑스 교과서의 경우,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보여준 독일군의 행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30조] ① 독일에서 베르사유 조약 231조는 강압에 따른 일방적인 범죄 자백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심각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② 조약 231조는, 그 작성자의 의도로 볼 때, 전쟁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독일의 법적 책임을 확립한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 유죄의 자백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도덕적 유죄라는 관념은 베르사유 회담의 부속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들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의안들은 평화 조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년 6월 16일자 연합군 의견서 서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독일의 책임에 대한 일반적 확인뿐만 아니라 강화 조건을 독일 대표단에게 통첩하는 데 뒤따른 여러 상황들이 독일에서 도덕적 규탄이라는 인상을 강화시켰다.

연합군 측은 배상금 명목으로 독일에게 요구할 액수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다. 조약의 이 부분에 대한 독일 국민의 저항과 격앙은 배상금 지급 의무의 불명확성과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협상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줄곧 유지되었다. 다른 한편, 독일의 불충분한 배상금 지불에 따른 반

복된 실망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미국에 상당한 상환금을 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제31조] 베르사유 조약을 검토해보고 나온 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제는 이 베르사유 조약 내용이 과연 평화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휴전했을 때 독일 정부가 받아들인 윌슨 대통령의 14개 조항에 부합하는가의 문제였다. ① 윌슨의 강화 조항은 부정확하게 작성되었던 까닭에 필연적으로 심각한 이견을 낳을 수 있었으며, 따라서 연합국 측은 자신들의 의도와 잘 맞아떨어지는 하우스 대령의 해석을 고집할 수 있었다. 특히 민족자결권의 적용은 필연적으로 여러 민족이 함께 섞여 사는 지역들에서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었다. ② 마찬가지로 독일은 모든 식민지를 빼앗기고 특히 동부에서 일부 영토를 빼앗긴 것은 14개 조항의 위반으로 간주했다(알사스-로렌을 프랑스에 양도하는 것은 윌슨의 14개 조항에서 명백하게 예견된다). ③ 독일 제국에 의한 '독일령 오스트리아'의 합병이 오스트리아 의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 것은 마찬가지로 14개 조항의 위반으로 보인다. ④ 연합국이 요구한 손해 배상금에 군인 연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윌슨이 원래 제시한 조건과 상충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포함시키도록 요구한 것은 애초에 프랑스가 아니었다. ⑤ 프랑스가 독일 제국에 의한 '독일령 오스트리아'의 합병에 반대했다면, 그것은 프랑스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었으며 독일의 국력이 지나치게 증대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제33조] 라인란트 문제와 독일의 무장해제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은 프랑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염려에 의해 결정되었다. 프랑스는 인구의 측면에서나 생산력의 측면에서 독일보다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염려는 미국과 영국이 1919년에 조인된 보장 조약에 대한 조인을 거부하자 더욱 커졌다.

[제35조] 독일과 프랑스의 교과서는 배상금 지불에 대한 평가에서 커다란 견해차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 차이는 평가 방법의 다양성과 실제로 지불된 액수를 산정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다. 정확한 수치에 대해 합의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가 받은 액수가 실제로 프랑스가 입은 피해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은 확실하다.

[제36조] 라인 강 좌안의 점령은 프랑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취해진 것이다. 라인란트 분리주의 운동이 점령 지역에서 프랑스의 몇몇 민간 당국과 군사 당국에 의해 부추겨졌다. 1918년-1919년에 이 운동을 외면하던 프랑스 정부는 1923년에는 사건의 추이를 방치했다. 루르 지방의 점령은 프랑스 정부가 독일에게 배상금 지불을 이행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일종의 담보 조치로 취해진 것이다. 종전 후 4년이 지나 취해진 루르 점령은 독일의 민족적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출전: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Professeur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No. 130bis, mars 1952)

## 〈참고문헌〉

## 〈역사 교과서〉

- Aimond, Charles, *Histoire, cours supérieur, 1852 à nos jours*, J. de Gigord, 1928.
- Gauthier-Deschamps(Mlle Miallier Souvigny), *Cours d'histoire de France, cours moyen*, Hachette, 1923.
- Geisse, Peter & Le Quintrec, Guillaume, dir., *Histoire/Geschichte, manuel d'Histoire franco-allemand*, Nathan/Klette, 2006.
- Lavisse, Ernest, *Histoire de France, cours élémentaire*, Armand Colin, 1913.
- Lavisse, Ernest, *Histoire de France, cours moyen*, Armand Colin, 1920.
- Malet, Albert & Isaac, Jules, *Histoire contemporaine depuis le milieu du XIX<sup>e</sup> siècle*, Hachette, 1929.
- Malet, Albert & Isaac, Jules, *Histoire de France et notions d'histoire générale de 1852 à 1920*, Hachette, 1922.
- Sentou, Jean & Carbonell, Charles Olivier, *Le Monde contemporaine, cours d'histoire*, Classe de Terminale, Delgrave, 1962.
- Herzfeld, Hans, *Kletta Geschichtliches Unterrichtswerk*, Ausgabe A Band IV: *Weltstaatensystem und Massendemokratie*, Stuttgart, Ernest Klett, 1965.
- Marte, Hans, *Deutsches Werden*, Teil III-*Neueste Zeit*, C. C. Buchners Verlag, 1929.
- Neubauer, Friedrich, *Lehrbuch der Geschichte für höhere Lehranstalten*, Teil V, *Vom westfälischen Frieden bis auf unsere Zeit*, Halle, 1910.
- Schnabel, Franz, *Grundriß der Geschichte für die Oberstufe*, Teil IV(*Geschichte der neuesten Zeit*), Leipzig/Berlin, 1927.

## 〈참고 자료〉

- 김승렬, 「숙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협의」, 『역사와 경계』, 제49호(2003년 12월).
- 박지현, 「민족 교육에서 유럽통합 교육으로?, 프랑스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 『프랑스사 연구』, 제13집(2005년 8월).
- “L’Allemagne et la France et leurs but de guerre(1914-1918)”,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Professeur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No. 198, mai 1966.
- “La France et la République de Weimar 1919-1931”,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Professeur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Numéro spécial 173, novembre 1961.
- “La Huitième rencontre franco-allemande des professeurs d’histoire”,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Professeur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No. 155, avril 1958.
- “La Septième rencontre franco-allemande des professeurs d’histoire”,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Professeur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No. 150 mars 1957.
- “Les manuels scolaires d’histoire en France et en Allemagne”,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Professeur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No. 91bis, mai 1937.
- Allan, Jean-Claude, “Manuels d’histoire et réconciliation franco-allemande”, in Cl. Carpentier, dir., *Identité nationale et enseignement de l’histoire*, Harmattan, 1999.
- Bauvois, Jeannie, “Images comparée de la Grande Guerre dans les manuels d’histoire allemands et français de la première moitié du XX<sup>e</sup> siècle”,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Vol. 21, 1999.
- Bauvois-Cauchepin, Jeannie, *Enseignement de l’histoire et mythologie nationale, Allemagne-France du début du XX<sup>e</sup> siècle aux années 1950*, Peter Lang, 2002.
- Bendick, Rainer & Riemenschneider, Rainer,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dans l’enseignement de l’histoire en Allemagne”, *Historiens et Géographes*, No. 369, février 2000.
- Bloch, Camille, *Les Causes de la Guerre mondiale, Précis historique*, Paul Hartmann, 1933.
- Claparède, Jean-Louis, *L’enseignement de l’histoire et l’esprit international*, Le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31.
- D’Hoop, Jean Marie, “Les aspects des relations intellectuelles franco-allemandes contemporaines: la coopération dans la recherche et l’enseignement de l’histoire”, *Historiens et Géographes*, No. 280, octobre 1980.

- Rousseau, Frédéric, “Ecrire et enseigner la Grande Guerre, toute la Grande Guerre”,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Vol. 21, 1999.
- Enquête sur les livres scolaires d'après-guerre*, Vol. I(France, Belgique, Allemagne, Autriche, Grande-Bretagne, Italie, Bulgarie), Centre Européen de la Dotation Carnegie, 1923.
- Girault, Jacques, “Instituteurs syndiqués et enseignement de l'Histoire”,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hors série 1984, Colloque, *Cent Ans d'enseignement de l'Histoire 1881-1991*.
- Isaac, Jules, “Regards sur le passé”,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Professeur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Numéro spécial 173, novembre 1961.
- Isaac, Jules, “Une tentative d'accord franco-allemand au sujet des manuels d'histoire”, *Revue d'histoire de la Guerre mondiale*, avril 1938.
- Isaac, Jules, *Un débat historique, le problème des origines de la guerre*, Rieder Editeurs, 1933.
- Jardin, Pierre, “La <Légende du coup de poignard> dans les manuels scolaires allemands des années 1920”, in Becker, Jean-Jacques et al., *Guerre et Cultures 1914-1918*, Armand Colin, 1994.
- Jeismann, Michael, *La Patrie de l'ennemi, la notion d'ennemi national et la représentation de la nation en Allemagne et en France de 1792 à 1918*, CNRS Editions, 1997.
- Kaspi, André, *Jules Isaac*, Plon, 2002.
- Krapoth, Stéphanie, *France-Allemagne, du duel au duo, de Napoléon à nos jours*, Privat, 2005.
- Krapoth, Stéphanie, “Visions comparées de manuels scolaires en France et en Allemagne”, *Cahiers d'Histoire, revue d'histoire critique*, No. 93, octobre-décembre 2004.
- La France et l'Allemagne, Espace et Histoire contemporaine/Deutschland und Frankreich, Raum und Zeitgeschichte*, Paris/Braunschweig, 1988.
- Müller, Horst, “Allemagne, la mémoire disputée de la Grande Guerre”, *L'Histoire*, No. 303, novembre 2005.
- Renouvin, Pierre, *Les Origines immédiates de la guerre*, Alfred Costes, 1925.
- Schüddekopf, Otto-Ernst, *History Teaching and History Textbook Revision*,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1967(국역본: 『미래를 건설

- 하는 역사교육』, 김승렬 역, 역사비평사, 2003).
- Seignobos, Charles, *Histoire sincère de la nation française*, P.U.F., 1933.
- Tison, Hubert, “La mémoire de la guerre 14-18 dans les manuels scolaires français d'histoire 1920-1990”, in Becker, Jean-Jacques et al., *Guerre et Cultures 1914-1918*, Armand Colin, 1994.
- Zeller, Gaston, *La France et L'Allemagne depuis dix siècles*, Armand Colin, 1932.

de deux pays, les manuels, dans les années 1960, traitent avec sérénité de la question épineuse des responsabilités de la guerre en se référant à la recherche historique controversé.

## 〈Résumé〉

### Du duel au duo

#### – Accord franco-allemand sur les manuels d'histoire et le problème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

Yong-Jae LEE

Cet article présente une analyse des démarches communes des professeurs-historiens français et allemands, qui veulent réviser leurs manuels d'histoire d'alors en usage pour améliorer l'enseignement d'histoire de deux pays. Le premier point en litige dans l'histoire des relations franco-allemandes réside, sans aucune doute, dans l'interprétation des causes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et de la prise des responsabilités de cette guerre.

Dans l'immédiat après-guerre, la plupart des manuels scolaires français sont pleins de citations et discours amers et même bellicistes envers les Allemands censés 'ennemi national' en imputant les responsabilités du déclenchement de la guerre aux allemands, et vice versa.

Un certain rapprochement franco-allemand s'amorce dès la fin des années 1920 à la suite des Accords de Locarno signés en 1925 entre l'Allemagne et les alliés victorieux. En France, le manuel Malet-Isaac et son auteur Jules Isaac jouent un rôle important dans la révision positive des manuels d'histoire. Le Malet-Isaac, depuis son édition de 1928, effectue une rupture avec tradition historiographique patriotique et présente sa version pacifiste. L'Accord franco-allemand pour réviser les manuels d'histoire est définitivement conclu en 1951, cela après l'échec inattendu du premier accord en 1935 à cause de la prise du pouvoir du Nazisme et du déclenchement de la Deuxième Guerre mondiale.

Cet Accord définit en particulière l'interprétation réciproque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Sa présentation est désormais loin de l'histoire-bataille mais s'efforce de faire comprendre le mécanisme conduisant à son déclenchement et de montrer la spécificité de son déroulement. Grâce à ces efforts multiples des professeurs-historiens

**〈Summary〉****From Duel to Duo****– French-German Accord on History Textbooks and the Problem of the First World War –**

Yong-Jae LEE

This article presents an analysis of the achievements made by French and German teachers in teaching of history and revision of school textbooks. The interpretation of 'the cause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rst World War occupies a major place in history courses to be commonly shared by two nations.

In postwar times, a number of French and German textbooks are filled with hostile quotations and descriptions to a so-called 'national enemy'. The French owed the war responsibilities to the German, and vice versa.

A certain time of franco-german rapprochement came out between late 1920s and early 1930s. In France, a famous Textbooks collection, the 'Malet-Isaac' and its author Jules Isaac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revision of historical textbooks. The 'Malet-Isaac', from its edition of 1928, became delivered from old historiography imbued with patriotic feelings, and presented an appearance of pacifism. In 1951, franco-german delegation of teachers succeeded in making an Accord for textbooks revision, its previous Accord of 1935 having failed in fulfillment with the advent of Nazism and the outbreak of Second World War.

The pages devoted to the First World War included not only a description of the war, but also its origins and consequences. Presentation entails more than simple battle accounts, trying instead to explain the mechanisms that triggered war, the specificity of the way it was conducted. It is owing to this efforts made by French and German teachers and historians that French and German textbooks published in 1960s begin to calmly discuss the thorny issue of war responsibilities by referring to controversial historical research.